

추미에 “검언유착 수사 손떼라” 지휘권 발동

秋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중앙지검 독립 수사” 지시

15년 만에 두번째...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지적도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정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정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추 장관이 이번 조치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15년 만에 헌정 사상 두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대검은 추 장관의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다. 오후 늦게까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안에 공식 입장을 내기 힘들다는 전언이다.

추 장관은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 지휘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 공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목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거쳐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통보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해당 공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을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다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휘권 발동을 시한 것이라 해석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자문단 소집 중단 및 중앙지검 독립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다. 사실상 자문단 소집 중단과 함께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대한항공이 여수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노선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면담을 갖고,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

3자 협의로 폐지 보류

코로나19 경영악화로

운항 재개는 차후 결정

의 관광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항공이 여수공항 개항시부터 48년간 운항해 왔던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노선 폐지에 대해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 폐지 결정을 보류하고 운항휴지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이 저의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 폐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수 관광객도 증가해서 조속히 운항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與 독주에 지지율 40% 붕괴... ‘협치’ 좋지만 발목잡힐까 고심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잘못했다” 50.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 밑돌면서 미래통합당과 한자릿수대 격차까지 좁혀지고,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가량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7월 1주차 주중집점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38.1%, 미래통합당은 30.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밑돈 건 지난 2월 2주차(39.9%) 조사 이후 20주만에 처음이다.

게다가 국민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마저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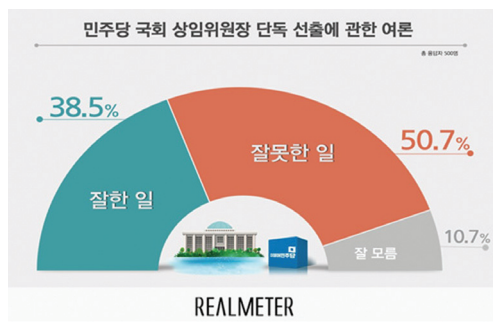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

가 ‘여야 간 합의 관행 무시 등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거대 여당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감’도 배경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지지부진하니 우리가 강하게(원구성 등을) 추진해도 국민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크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3차 추경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과 협치의 여지는 좁다.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일하는국회법은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어 합의체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 상임위 구성과 여당 중심의 3차 추경 심사 등 거여(巨與) 독주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건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당장 급한 3차 추경안 처리를 마치면 국정조사 등 통합당의 요구안 일부를 수용해 원내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